

대학이 생각해 볼 문제들

김성복 뉴욕주립대(Suny-Albany) 사학과 교수

지금 한국의 대학들은 기로에서 있는 것 같다. 밖에서 밀려오는 압력은 대단하다. 특히 '국민의 정부'의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개혁안은 대학들의 구태의연함과 인주를 허용치 않는다. '개혁'이란 깃발 아래 막대한 권한과 돈주머니를 갖고 있는 교육부의 지시를 그들이 무시할 수 없다. 무시하면 그 대가는 고사(枯死)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학들은 양처럼 순순히 당국이 하라는 대로 따르고 싶지도 않은 것 같다. 대학의 운영을 맡고 있는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그리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들의 고충은 외지에서 온 필자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교육부에서 나오는 책자나 대중매체, 그리고 대학간부나 교수들과의 대화를 통해 필자는 교육부 대학개혁안에 잡음이 많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육부의 반복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그 안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목적과 원리는 뚜렷하다. 대학들이 실용주의와 시장경제 논리, 사회의 수요에 알맞게 한국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호응토록 하는 것이다.

현 교육부의 행방은 생소하지 않다. 지난 30여 년에 걸쳐 군림했던 군사정권들은 정권유지와 사회안전이라는 차원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보다는 교육의 통제에 급

급했다. 하지만 공학이나 자연과학은 그들의 부국강병이라는 또 다른 과제에 맞추어 장려를 아끼지 않았다. 공대, 산업대, 과학기술원, 정보통신 관련학과, 기능대 등이 마구 설립되었다. 나라의 오랜 숙원인 빈곤, 무지, 후진성으로부터의 탈피를 이룩하고자 하는 그들의 희망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산업화, 기술화에 집중된 그들의 정책은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민소득의 급증, 자동차의 범람, 국도와 고속도로 등 대중교통·통신망의 확충, 식생활의 향상 등 거의 모든 생활 여건은 이제 외관상으로는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했음을 역력히 보여준다.

그런데 IMF 위기로 나타난 갑작스러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과 경색은 교육부로 하여금 '경제, 공학, 기술 제일주의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그에 따라 대학들이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도록 나서게 하는 것 같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오늘의 교육부 개혁안은 군사정권의 산업화·기술화로서 후진성을 탈피하는 원초적인 목적을 한 단계 넘어서, 선진국과 견줄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 전문인을 많이 양성하고 그러기 위해 일차적으로 특정 대학과 특정 분야-컴퓨터, 과학, 생명공학 등-를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대학원 중심대학이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과업을 위해 대학원의 인적 자

원을 재조직하려는 것이 이 개혁의 취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서울대의 학사과정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한 방안을 제시한다. 그것은 모집단위와 학사이수의 광역화를 통해 학부(두 개 이상의 학과를 묶는)제를 만들고 입학한 학생들에게 전공선택의 자유와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 학사개혁안은 대학원 중심대학의 골자보다 훨씬 복잡하고 애매하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교육부가 무엇을 원하는가는 짐작할 수 있다. 특별전형의 교장추천제나 생활보호대상자전형, 특기자전형 등을 강조하고 수능이나 본고사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입학의 하향 평준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맥락을 같이해 교육부는 우수 대학들이 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등급제를 반대하고 수능 시험을 필 수 있는 대로 쉽게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럼으로써 학사과정에 관한 한 대학간의 차등도 결국 없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 교육부 개혁은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학생들이 사설학원에서 소비하는 돈과 에너지를 줄이려는 목적도 담겨 있다고 한다.

원론적으로 보아 교육부가 의도하는 바, 즉 학과 단위로 모집하는 입학제도를 지양하여 학부제를 도입하고, 입학 후에 학생들이 소속 학부 내에서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어떤 특정 대학원이나 특정 분야를 나라와 사회의 필요에 따라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전자의 경우, '학생의 선택의 폭'이란 두 개 학과 많아야 세 개 학과 안에 국한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한 학부 안에서 일본어과나 영어과나, 또는 국내경제학이나 국제경제학이나, 정치학이나 외교학이나 등을 선택하는 정도이다. 그래도 이것은 현행 한 개 학과로부터 두 개 또는 세 개 학과 사이의 선택으로 한층 개선된 것이라 말할지 모르나, 특정 분야 안에서만 그 선택이 이루어지는 만큼 유명무실하다. 학생의 선택의 자유를 목표로 이런 학부제를 채택했다면 그것은 남득이 가지 않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기존 학제로도 부전공이나 선택과목 또는

교양강좌(학점으로 보면 90학점이나 된다)라는 통로를 거쳐 그 한정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 이상의 전공을 장려하기 위해 이 학부제를 도입했다면 학생 대부분은 그것을 선호하지 않고, 또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미국 대학의 상황을 참조하면 그렇다) 또 반드시 두 분야(disciplines 또는 fields)를 전공한 졸업생이 한 분야 전공자보다 대학원이나 직업시장에서 더 격격한 후보나 전문인이 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학생들의 전공선택의 자유를 진정으로 확대하려면 협소한 학부 내에서의 선택을 허용하기보다는 학부라는 울타리를 넘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주어야 한다. 즉, 소정의 적절한 요건이 충족되면 인문학에서 사회과학, 자연과학, 전문대학원(경영대학 등을 포함해서)으로까지 학생들의 전과나 전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생각해 볼 만하다. 듣기에 교육부도 그러한 유연성 있는 학제를 원하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는 네 개의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첫째 위험은 무제한적인 선택의 자유는 종합대학교가 기형화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부모님의 충용에 귀를 기울이며 -인기가 있고, 식권(食券)이 보장되며, 좋은 관록을 얻을 전망이 밝은 분야의 학과, 학부나 대학으로 '지나치게' 몰리고, 그렇지 못한 곳은 텅 비는 사태가 올 것이 틀림없다. 교육부도 이 가능성을 짐작했다. 이미 학부제를 시행한 여러 대학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며, 만일 이 추세가 얼마 동안 계속된다면 종합대학교도 전문직업대학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위험은 직업이나 실용적인 것만을 염두에 두고 대학교육, 전공 그리고 전과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결국 극도로 협소한 강좌나 교육과정에서만 공부하게 되어 자기 전공의 보다 넓은 철학적(윤리적), 역사적, 사회적 기초와 틀(context)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지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교양강좌나 여러 기초학문 분야('liberal arts & sciences' 또는 'liberal education')의 공부가 자기의

실용적 목표와 직접 관계가 없다고 오관하여 피하거나 또는 마지못해 택하는 친박하고 고통스러운 대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 풍조에 어부하는 대학은 유연성, 지성, 시민의식, 인간성 등을 전혀 갖추지 않고 인생의 참맛과 의미를 모르는 감성적이지 못한 직업인, 과학자, 기능인만을 양산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좁게 공부한 사람들은 항상 변하는 노동시장과 기술시장의 수요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협소하고 눈앞의 것만 생각하는 교육은 그들 자신에서도 현명한 선택이 아닐 것이다.

오늘의 수요와 인기에만 급급하는 교육정책은 대학의 또 하나의 사명, 특히 종합대학교의 본연의 사명-긴 안목으로 나라의 앞날을 생각할 때 복지, 지식, 지혜, 지성, 도덕, 기술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식과 문화, 그리고 세계의 정향에 밝은 인재와 지도자를 키우는 사명-을 저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다. 교육은 우리의 자손을 위한 투자다. 나라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다 좋은 말이다. 그러나 교육의 단기적 수익성이라는 것은 정책목표에서 최하위를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관련해서

대학의 또 하나의 사명은, 나라의 양심이 되어 바깥 세계의 병폐와 추세를 예의 주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에 있다. 이러한 대학의 미래지향적 면모는 우리 나라에서는 진부한 것으로 치부되는 것 같다. 또한 불행한 일이다.

앞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무제한적으로 전과나 전학의 자유는 거의 모든 기초학문 분야(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역사, 문학, 철학 등)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학생들은 쓸모 있

게 보이는 응용학문 쪽으로 쏠리기 때문이다. 만일 기초학문이 위축·퇴보한다면 결국 그에 기반을 두는 응용학문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은 당연하다. 필자는 우리 교육계가 기초학문과 응용학문간의 상호의존관계에 대해 예민하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이것이 기우이기를 바란다.

전기한 네 가지 함정을 염두에 두고 시장의 수요, 학생의 전공선택의 기회, 그리고 대학의 사명의 명제들을 어떻게 다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 과업은 참으로 쉽지 않다. 특히 오늘날의 한국적 풍토에서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균형감과 지도력을 심본 발휘하면 그것을 기꺼이 성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부와 대학당국은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에 상관없이 최고급 수준에 달했거나 그런 잠재력을 갖춘 분야나 학부에는 중점적으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학의 사명과 기초학문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인기가 없고 수요가 적더라도 대학의 종합적·균형적 발전을 위해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 나라의 필요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특정한 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대학당국과의 진지한 협의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학생의 전공·전과선택의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은 대학의 수용능력과 면학이란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전과 기회를 오직 학생의 자유에만 맡기기에 많은 한국 대학들의 인프라는 아직은 너무 빈약하고, 전기한 바와 같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대학과 학과 단위의 '전과·전학 교수위원



회'가 1학년 2학기 말부터 2학년 말까지 학생의 신청을 철저히 심사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이 좋으며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가진 학생에게만 그 자유를 주어야 한다. 이 규제는 여러 가지로 좋은 파생효과를 낳는다.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학이 좋은 강좌나 교과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을 유치하고 그들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학과나 대학은 학생수용과 교수능력의 범위 안에서 신축성 있게 그들의 책무를 다 할 수 있게 된다.

필자는 학부제와 모집단위의 광역화가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싶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을 맞이할 인프라가 현재에는 없다는 것이다. 신입생들은 대학이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는 곳이며, 대학이 그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대학교육이 그들의 적성만을 살리는 곳인가. 또는 식권을 주기 위해 있는 것인가. 무슨 다른 고상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깊은 이해도 없다. 이런 상황에 그들을 보살피고 교양과목, 전공선택을 지도하는 학사 조연자(academic advisers) 시스템마저도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방황하는 신세가 되기 마련이다. 전공선택을 미리한 학생은 자기 전공의 선배나 교수로부터 자문을 받을 기회가 있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또 필자가 알기로는 한국의 교양강좌 체제는 아주 빈약하며 교수나 학생들이 교양과목들을 '가볍게 여기고' 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대학의 첫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할 마음이 생기겠는가? 그리고 그런 보잘 것 없는 필수과목 때문에 그들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야만 하는가? 참으로 학생들의 첫 2년 동안에 탁월한 교양강좌 체제가 마련되지 않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지도하는 조연자들이 없다면 입학의 광역화나 학부제는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인프라 구조는 교육부 개혁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 인프라는 현행 교과과정과 교직원 구조의 재편

성과 재투자를 요구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지면의 제약상 생략하기로 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학부 4년 과정에 있어서 학과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두 개 또는 세 개로 묶어 놓은 학부 안에서 전공학과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학부에 속하는 학생들이 어떠한 과목을 선택하고, 누가 그들을 지도할 것이며, 전공이 두 개, 세 개일 경우 어느 전공학과가 학생을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이 없다. 따라서 여러 가지 억측이 나돌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교육부는 학부 학생에 관한 한, 한 학과 또는 한 분야의 전공이라는 아이디어 그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교육부 당국자가 대학의 학과들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유사학과들의 통폐합을 권장하고 또 전문연구는 대학원에 가서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일련의 정책들은 학사과정의 전문화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 태도를 말해 준다.


필자는 교육부의 이러한 학사정책의 가정(假定)을 염려한다. 연구나 학과의 세분화는 악이 아니다. 세분화는 대학이 시작된 이래 꾸준히 진전된 것이며 과학과 사회의 발전이 그것을 촉발시키고 부추겼다. 그것은 불가피하며 연구의 전문화를 위해 어떤 경우에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만일 대학들이 뚜렷한 학문적 이유 없이 세분화되었다면 그것은 통폐합으로 응징 받아야 한다. 문제는 세분화가 아니고 학과들의 폐쇄성에 있다. 이것은 전공의 자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또는 연계적 연구의 필요라는 명제로써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필자가 의심하는 것은 교육부가 대학 4년을 광역화해서 인기 없는 학과들을 폐지하거나 또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전공을 착실히 이수하려면 학과의 건전한 활동이 필요하다. 우리가 학생들의 전공이수가 학사교육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학과들의 존속은 중요한 것이 못된다. 필자는 전공과 학과와는 유기적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교육부가 학부 4년을 광역화하거나 교양강좌화시킬 의도가 없고, 전공을 장려할 의지가 있다면 학과들의 존속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좋은 학문과 교육의 이치에도 맞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학과들까지도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가 내세우는 대학원 중심대학의 목적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방식에 대해서는 큰 의문을 갖는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대학원에서 비로소 전문·정에 교육과 연구를 해야한다고 빈번히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일 것이다. 왜냐하면 전공이나 연구를 학사과정에서 착실히 해 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대학원에서나 바깥 직장에서도 멋진 전문인이나 연구원이 될 자질을 갖추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학원에 국한해서 말하자면, 이런 학생들은 대학원에서 기대하는 연구나 전문화 과제를 끝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 연구를 잘 하라고 재촉하는 것은 마치 벗나무 위에 플라스틱 천을 덮고 땅바닥에는 장작을 피워 적시에 꽃을 피우라고 기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다.

논공행상은 문명사회의 원리원칙이다. 따라서 대중교육과 정예교육을 병행시킨다는 것은 민주사회와 기능사

회에서도 꺾할 수 없는 도리이다. '국민의 정부'의 교육부도 대학원 중심대학, 선택의 자유를 위한 모집단위의 광역화나 학부제를 위해 중·고등·대학교의 차등화나 기초학문의 건전한 발전도 함께 추진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교육부 개혁안에는 좋은 아이디어는 많이 들어 있으나 그 아이디어가 잘 정리되지 않았고, 또 설명에도 혼선이 많아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안타깝다. 

김성복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한 후, 위스콘신대학을 거쳐 미시간대학에서 "미국 초기사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북대 교수, 풀브라이트 교환 교수, 윌리엄 메리 대학 교수, 일리노이대학(삼페인) 교수를 역임하고, 미국 뉴욕주립대(Suny-Albany) 학장, U.C.버클리의 교육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대 서양사학과 초빙교수 및 연세대 출장 방문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인 『식민지 시대 뉴욕 지방의 지주와 소작인』으로 미국사 연구회에서 학술상을 받았고, "미국 혁명의 비극"이라는 논저는 미국 사학계의 기존의 통설을 뒤집은 명저로서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 혁명사의 우리 나라 해방 50년사를 집필중이다.